

‘기술유출범죄, 최대 12년 실형 가능’ 특허청, 전(全)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 쾌거

-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 수상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사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전(全)부처 참여 적극행정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 쾌거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중앙부처에서는 총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정해졌다.

특허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강화로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 >

올해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특허청의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는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양형기준 강화를 완료한 사례다.

양형기준 개정으로 개발비 100억원 이상 투입된 철강제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에서 처벌의 경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최대 12년의 실형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 구영민 기획조정관은 “올해 수상사례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주요 내용

붙임 2: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현희 (042-481-5057)
		담당자	사무관	황예원 (042-481-5723)
			주무관	원문경 (042-481-5083)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담당자	서기관	이형원 (042-481-5842)
			주무관	권창욱 (042-481-5771)

결과	사례 제목 및 주요 내용													
	◆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문제 상황	□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영업비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유출시도 지속발생* * 최근 7년간('17~'23)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140건, 피해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추산(국정원) □ 국가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해도 처벌 수준이 낮아 기술유출의 심각성 대비 범죄예방·억제 효과 미흡 * ('17~'19) 유죄판결 중 98%가 2년 이하 징역, 75.3%는 집행유예(양형위) ** ('19~'22)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실행비율 10.6%, '22년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 ⇒ 국가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영업비밀·기술유출 범죄 예방·근절 등을 위하여, 양형기준 정비는 필수적													
행안부장관상	적극 행정	□ 특허청은 대검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송에서 범죄형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득노력 경주 ○ 제8기와 제9기 양형위원회('21.4.~'25.3.) 운영기간 중 특허청-대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양형기준 개정 완료 <양형기준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 <table><tr><th colspan="3">제8기 양형위원회 ('21.4.~'23.3.)</th><th colspan="3">제9기 양형위원회 ('23.4.~'25.3.)</th></tr><tr><td>양형기준 개정 필요성 공식제안</td><td>양형위원회 보고안건 상정</td><td>대검-특허청 양형기준 개정 협업추진 (연구용역)</td><td>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개최</td><td>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1순위 안건채택</td><td>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td></tr></table>	제8기 양형위원회 ('21.4.~'23.3.)			제9기 양형위원회 ('23.4.~'25.3.)			양형기준 개정 필요성 공식제안	양형위원회 보고안건 상정	대검-특허청 양형기준 개정 협업추진 (연구용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개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1순위 안건채택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제8기 양형위원회 ('21.4.~'23.3.)			제9기 양형위원회 ('23.4.~'25.3.)											
양형기준 개정 필요성 공식제안	양형위원회 보고안건 상정	대검-특허청 양형기준 개정 협업추진 (연구용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개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1순위 안건채택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주요 성과	□ 해외 기술유출 시 최대형량을 12년(기존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권고형량을 상향하고, 초범도 실행가능토록 집행유예 판단기준 수정 등 양형기준 정비 완료 <개정된 양형기준을 기존 선고결과에 반영한 시뮬레이션> 사례 철강제조기술 중국유출 개발비 100억원 이상 초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존선고 해외유출, 상당한 개발비로 형량가중, 초범삭제로 최대 12년 실행 가능 (국가핵심기술은 18년) 개정이후													
	⇒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과 정보분석 및 수사 협력을 통해 연간 5.4조원 규모의 기업 피해 예방 효과 기대													

특허청은 11. 26.(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사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장관상 시상 사진>



사진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최영미 사무관(앞줄 왼쪽 2번째)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